

□ 일본 경제 다시 침체되나

1. 일본 경기 재침체론 부상

- 2005년 2월 16일 발표된 일본 내각부의 GDP 1차 속보에 의하면 2004년 4/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.1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분기 연속 하락 후, 회복이 저조하여 일본 경기 재침체론이 부상함
- 2004년 2/4분기 및 3/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각각 전기 대비 -0.3%를 기록한 데 이어 2004년 4/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.1% 성장하는데 그쳤음
- 한편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단칸(短観,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) 지수와 실제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향지수가 악화되었음
  -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단칸지수의 경우, 2005년 1/4분기 제조업 부문이 전기 대비 5포인트 감소되었으며, 2/4분기에도 3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음
  - 2005년 2월 경기동향지수(개정치)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일치지수(동행지수)가 30.0%, 수개월 앞의 경기 전망을 설명하는 선행지수가 18.2%로 나타나 일본 경기가 후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

< 일본의 2004년 GDP 성장률 추이(실질, 전기 대비) >

(단위: %)

구 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실질 GDP 성장률	1.5	-0.3	-0.3	0.1

자료: 일본 내각부, 「국민경제계산」, 2004년.

< 단칸(短観) 지수 변동 >

구 분	2005년 1/4분기	2005년 2/4분기
제 조 업	6 (-5p)	3 (-3p)
비제조업	-6 ( 1p)	-7 (-1p)

자료: 일본은행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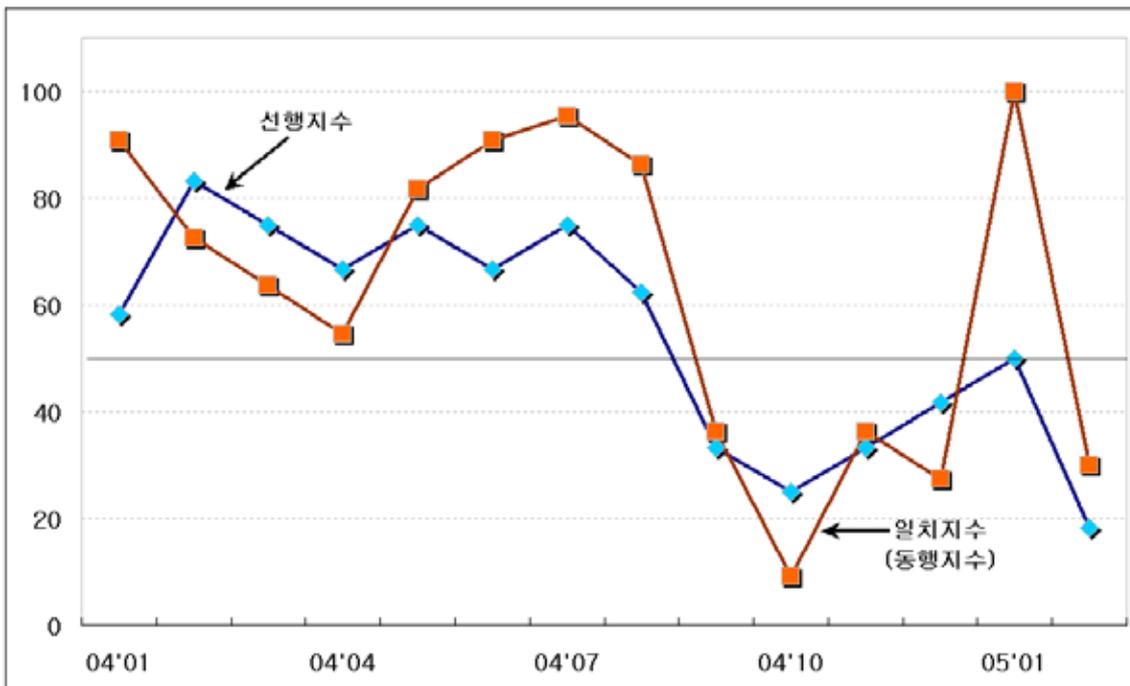
주: ( ) 안의 값은 전기 대비 등락폭을 나타냄.

< 참고 > 단칸지수와 경기동향지수

- 단칸지수는 일본은행이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업황감에 대한 조사 결과로 '좋음'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에서 '나쁨'으로 응답한 기업 비율을 제한 값임.
-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동향에 민감히 반응하는 복수의 지표 가운데 3개월 전에 비해 상승한 지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, 일치지수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0%를 상회할 경우를 경기 확대 국면, 하회할 경우를 경기 후퇴 국면으로 판단함.

< 경기동향지수의 변동 추이 >

(단위: %)



자료: 일본 내각부.

2. 일본 경기 침체의 원인

-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일본 경기 침체는 내수 침체, 수출 증가율 감소와 수입 증가율 증가, 정부의 구조조정, 금융정책의 실효성 약화 등에 원인이 있음
- (기업 및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민간소비 악화)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은 2004년 2/4분기(전기 대비) 0.1% 증가에 그쳤으나 3/4, 4/4분기에 각각 -0.2% 및 -0.3% 감소하여, 경기 재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음
  - 민간 최종 소비 지출의 악화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구조조정 과정 하에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임
  - 한편 정부의 재정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소비 심리 악화 또한 민간 소비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함

< 수요 항목별 국민 계정 동향(실질, 2004년) >

(단위: %, %p, 전기 대비)

구 분	1/4 분기	2/4 분기	3/4 분기	4/4 분기
실질 GDP	1.5	-0.3	-0.3	0.1
국내 수요	1.3	-0.5	-0.1	0.2
민간 최종 소비 지출	0.7	0.1	-0.2	-0.3
민간 기업 설비 투자	-2.3	3.7	-0.1	0.1
민간 주택	0.4	1.1	0.8	0.9
민간 재고품 증가	(0.5)	(-0.3)	(0.0)	(0.2)
공적 수요	3.0	-3.4	-0.1	0.6
공공 투자	8.7	-16.9	-1.9	-0.4
순 수출	(0.2)	(0.2)	(-0.2)	(-0.1)
수출	4.7	3.5	0.6	1.2
수입	3.3	2.0	2.2	2.4

자료: 일본 내각부, 「국민경제계산」, www.cao.go.jp.

주: ( ) 안은 기여도임.

- (중국 수출 증가율 급감에 따른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) 순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 성장 기여도가 2004년 2/4분기까지는 플러스였으나, 2004년 3/4분기, 4/4분기(각각 -0.2%p, -0.1%p)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
  - 2004년 3/4분기부터 수입 증가율이 증가하는 반면 수출의 증가율은 2/4분기의 3.5%에서 3/4분기와 4/4분기에 각각 0.6% 및 1.2%로 하락함
  - 이는 2004년 6월(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36.2%)을 정점으로 對中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(2004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8.6%)하였기 때문임

- (재정 재건을 위한 각종 구조조정 정책에 의한 영향) 2005년부터 시행된 사회 보장비 인상, 및 소득세 및 소비세 등 가계 세금 부담 증가로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어 소비 침체가 지속됨
  - 간병보험료는 2005년도부터 40~64세 1인당 평균 4만 5,054엔으로 8% 인상됨
  - 국민연금보험료는 2007년에 소득의 14%에서 19%로 인상될 예정임
  - 한편 2006년 1월부터 시행될 定率減稅 개정안은 소득세 감세 한도액을 12만 5,000엔으로, 주민세는 2만 엔으로 50% 감소시킴
  - 2007년에는 소비세 인상이 도입될 예정으로 민간 소비 지출 감소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
  - 구조조정 정책 혼선 및 지연 등 경기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 또한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

< 일본의 주요 세율 인상 내용 >

구 분	년 도	내 용
간병 보험료	2005년	40~64세 연령층 대상, 8% 인상
국민연금보험료	2007년	소득의 14%에서 19%로 인상
정률감세 개정	2006년	소득세 및 주민세 감소 한도 50% 삭감
소비세	2007년	현행 5%에서 7~8%까지 인상

- (과잉 유동성 공급 등 금융정책의 실효성 약화)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최대의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달성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, 최근 과잉 유동성 공급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정책 실효성이 약화됨
  - 소비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2005년 1월 -0.1%, 2월 -0.3%로 또다시 하락함으로써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기 부양 목적은 이미 달성하기 어려움
  - 2005년 1월~4월까지 단기 금융시장 자금 공급 횟수는 모두 97건으로 2004년 같은 기간의 71회를 초과하였으며, 과잉 유동성 공급 현상은 모두 48회로 2004년 같은 기간의 3회의 16배임

3. 재침체 지속 전망

- (2006년 3월까지 경기 후퇴) 2005년 4월 일본은행의 GDP 성장률 하향 조정에 이어 UFJ종합연구소, 다이와증권, 미츠비시증권 등 주요 연구기관들도 경기 후퇴를 전망하고 있어, 일본의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
- (일본은행 GDP 성장률 하향 조정) 일본은행은 2005년 4월 2005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이전 (2004년 10월) 전망치인 2.2%~2.6%에서 1.2~1.6%로 1%p 하향 조정함

<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2005년 경제 전망 (전년 대비) >

구 분	2004년 10월 전망	2005년 4월 전망
정책위원 대다수 전망	2.2%~2.6%	1.2%~1.6%
정책위원 전원의 전망	2.0%~2.6%	1.1%~1.8%

자료: 일본은행, 「주요금융경제 지표·물가」, www.boj.or.jp.

- (민간 연구기관들은 기업 수익악화로 경기 재침체 전망) 민간 연구기관들은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조정과 기업 수익 악화는 내수 악화를 통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, 2006년 3월까지 경기 침체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
  - UFJ종합연구소는 2005년 1/4분기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을 -0.4로 예측하는 등 일본의 민간 연구기관들은 일본의 경기 침체가 2006년 3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< 일본 민간 금융기관의 GDP 성장률 전망 (전기 대비) >

구 분	05년 1/4분기	05년 2/4분기	05년 3/4분기	05년 4/4분기	06년 1/4분기
다이와증권	0.5%	0.1%	0.2%	0.2%	0.2%
미츠비시증권	1.4%	0.2%	0.3%	0.1%	0.1%
UFJ종합연구소	-0.4%	0.2%	-0.2%	-0.1%	0.2%

자료: 다이와증권, 「제144회 일본경제예측」, 2005년 2월 21일, 미츠비시증권, 「Economic Research: Macro Economy」, 2005년 4월, UFJ종합연구소, 「내외경제 Monthly」, 2005년 4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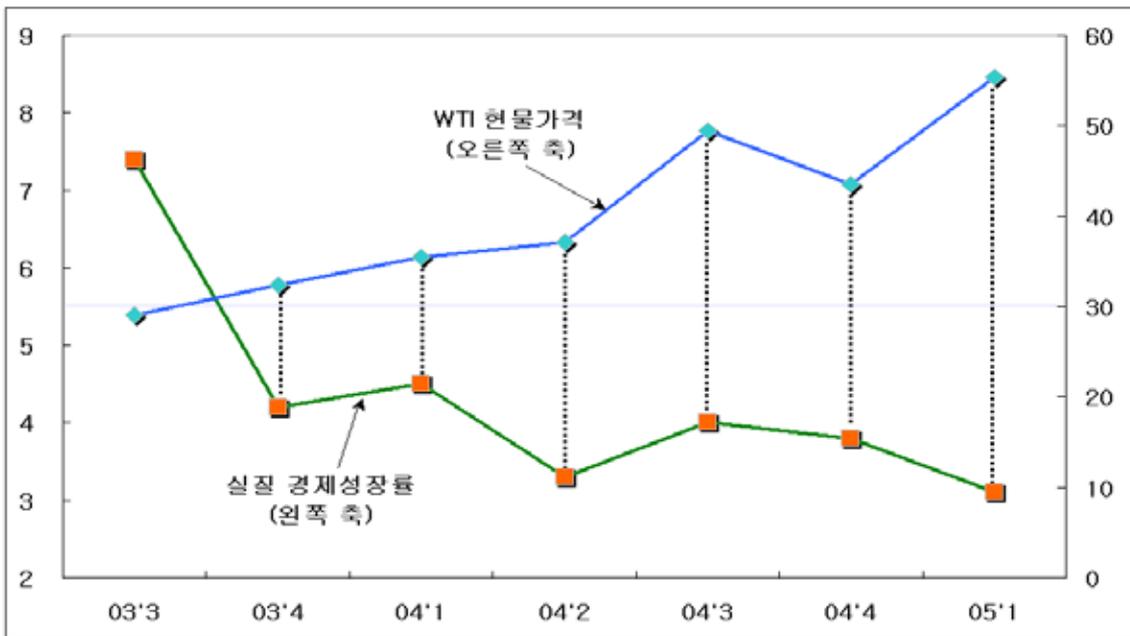
○ (미·중 경제 성장 저하에 의한 경기 재침체)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될 경우, 수출과 생산이 밀접하게 연동하는 일본 경제를 재침체시킬 것임

- (미국 경제 성장 저하에 의한 경기 악화) 고유가 지속, 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일본의 경기 악화가 예상됨

-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에 의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04년 4/4분기(4%→3.8%)에 이어 2005년 1/4분기(3.8%→3.1%)에도 둔화되었으며, 향후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저하될 전망이다
- 한편 2005년 5월 3일 연방 기준 금리를 3%대로 설정하였고 향후 4%까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,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가 대두됨
- 따라서 고유가 지속과 금리 상승에 따르는 미국 경기의 감속은 일본의 對美 수출을 감소와 생산 활동을 둔화시켜 경기 재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<유가 변동과 미국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(분기별)>

(단위: %,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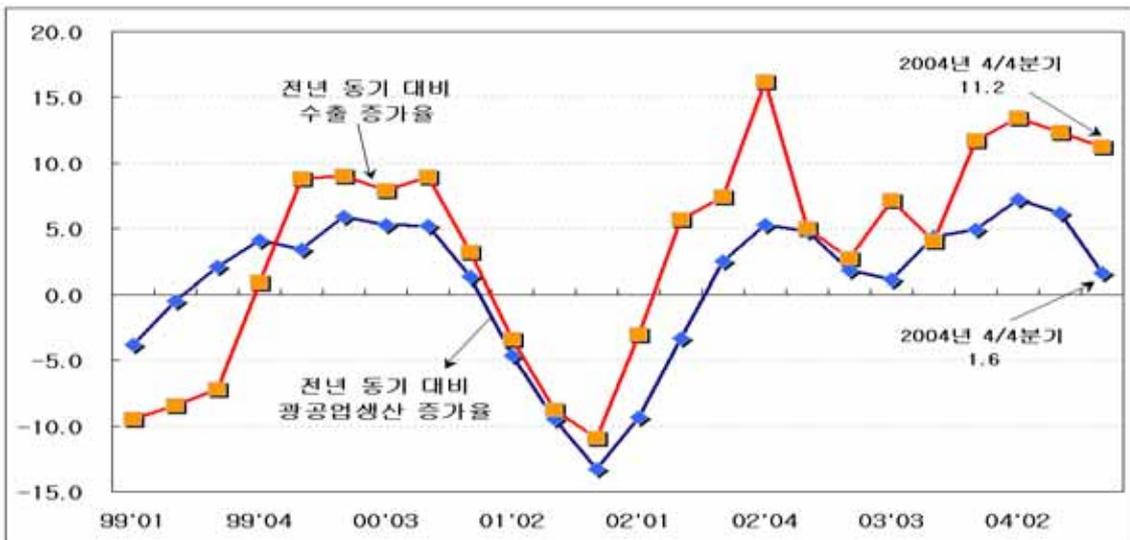
자료: BEA, 한국석유공사.

- (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의한 경기 침체) 최근 중국 경제의 연착륙 및 위안화 절상은 일본의 경기 회복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됨

- 위안화 평가 절상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하락시킴으로써 일본의 對 중국 수출 감소를 유발할 것임
  - 더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對美 수출 경쟁력 상승 또한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임<sup>1)</sup>
- (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조정과 기업 수익 악화에 의해 경기 재침체) 결국 수출부진은 기업 생산을 압박하여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서, 고용 및 소득의 부진과 그에 따르는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일본 경기를 재침체시킬 것임
- 수출 둔화는 기업 수익을 감소시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연시킬 것임
  - 한편 기업 수익의 감소는 고용 및 소득 환경을 악화시켜 가계 소비 지출을 감소시킬 것임
  -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연동되는 경제 구조 때문에,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환경의 악화가 일본 경기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
< 일본의 수출 증가율과 광공업 생산 증가율의 연동 >

(단위: %)



자료: 일본 재무성, 「무역통계」, [www.customs.go.jp](http://www.customs.go.jp), 경제산업성, 「광공업 생산·출하·재고 통계」, [www.meti.go.jp](http://www.meti.go.jp).

1) 위안화의 평가 절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에 대한 평가 절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중국에 대한 일본의 對 수출 경쟁력 상승 폭 또한 상쇄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가정을 두더라도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고성장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중국 변수가 일본의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임.

4. 시사점 및 정책 과제

- 일본의 경기 침체 원인은 편중된 수출 구조 하에서의 수출 환경 악화와 내수 부진, 재정 재건을 위한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민간 소비의 위축 등임
-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과 유사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, 편중된 수출 환경의 악화는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 - 한국의 2004년 전체 수출 (약2,538억 달러) 중 중국 (19.6%, 약428억 달러) 과 미국 (16.9%, 약498억 달러) 의 총 수출 비중이 36.5%로 일본 (35.6%) 과 유사함
  - 따라서 이러한 편중된 수출 환경의 악화는 기업의 생산 및 설비 투자를 압박하고, 가계 고용과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
- 한편 우리나라 또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, 국가 채무의 누적적 증가와 급격한 구조조정에 의해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음
  - 현재 일본 정부는 재정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나, 2000년 464조 엔 (GDP 대비 125.9%) 이었던 국가 채무액이 2004년 740조 엔 (GDP 대비 146.5%) 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음
  -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또한 2002년 19.5% (133.6조 원) 였으나, 2004년 26.1% (203.1조 원) 으로 증가하였으며, 2006년에는 GDP 대비 29.8% (271.2조 원) 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  - 따라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국가 채무의 누적적인 증가 뿐 아니라 재정 재건을 위한 구조조정 정책은 소비 심리를 악화시켜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수 있음

-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출 지역 다변화, 조기 재정 건전화, 정부 내 정책 혼선과 지연 회피를 통해 경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경기 침체로부터의 조기 탈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할 것임
  
-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 특정 지역의 경기 감속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
  -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 및 남미 각국들과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, FTA 교섭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통상 전략을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있음
  - 우리나라도 FTA 교섭 등을 통해 세계적인 블록화 현상에 대한 대비 뿐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중장기적인 대외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야할 것임
  
- 정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·지속시켜야 할 것이며, 재정 수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
  - 일본의 국가 채무 증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비체계적이고 임시적인 경기 부양책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
  - 따라서 정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국가 재정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정성을 유지·지속시켜야 함
  - 또 장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의 도입을 통해 국가 재정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
  
- 한편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부 내 혼선과 충돌을 회피하여, 경기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함
  - 정부는 정치적 갈등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고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을 통해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,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다 “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 시스템” 구축이 필요함

이부형 연구위원 (3669-4181, lbh@hri.co.kr)